

쌀값 폭락 속 벼멸구 습격...전남 농민 억장 무너진다

르포-벼멸구 피해 속타는 보성 들녘

“쌀값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니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를 한 달 남짓 앞둔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의 사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염이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벼멸구 피해까지 확산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19일 찾은 보성군 보성읍의 한 논에는 노란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들이 말라비틀어져 쓰러진 것이다. 논 한 마지기(660㎡)에만 이러한 구멍들이 수십여 개에 달했다.

보성에서 15년째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윤병구(52)씨는 “추석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폭탄’을 맞아버렸다”고 한탄했다.

시들어버린 벼를 매만지던 윤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 논에 (벼멸구 피해가) 조금 생겼다 싶더니 하루 사이에 우리 논까지 내려왔다”며 “멸구가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방제가 이미 늦은 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를 비롯한 광주·전남 농민들은 “추수를 앞두고 벼가 딱딱 쓰러지니 허탈하다”고 입을 모은다. 1년 땀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남 지역 전체 벼 재배면적(14만7715ha)의 7.3%의 논(1만776ha)에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보성이 3182ha

추수 앞두고 곳곳 벼 말라죽어

전남 재배 면적의 7.3%가 피해

쌀값 떨어지고 고물가에 3중고

농민들 “농사 포기할 판” 한숨만

“피해지역 주변까지 일제 방제해야”

로 피해가 가장 크고 장흥 1734ha, 해남 1146ha, 화순 1318ha, 고흥 973ha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전남에서 벼멸구 피해는 2022년 995ha, 2023년 175ha에 그쳤는데, 올해 벌써 1만776ha의 피해가 발생했다. 평년(3876ha)과 비교해도 178%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추석연휴 기간 방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가 더 확산했다는 점이다.

벼멸구는 벼를 숙주식물로 하는 해충으로, 6-7월 중국에서 유입돼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고 벼 출수 이후(8-9월) 벼대의 즙액을 먹는다. 벼대가 노랗게 타들어가다 쓰러진다. 심하면 벼가 고사하고 멸구의 배설물 때문에 그늘음병도 생긴다.

농민들은 최근 쌀값이 폭락에다 벼멸구까지 겹쳐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흥군 회진면 덕산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황인성(58)씨는 “지난해까지 6만원 넘는 조생벼 40kg이 최근 5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름값을 비롯해 농자재값 등이 모두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는 상황에서 병



벼멸구 피해로 말라죽은 벼.

충해 피해까지 확산하니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주변 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황씨는 2-3차례 방제를 거듭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농업정책 탓에 저농약을 여러 차례 살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2-3배 더 든다고 황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벼멸구 피해를 입은 나라의 경우 농협이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테니, 그렇지 않아도 떨어진 쌀값이 더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남도는 벼멸구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32억원(도 6억1000만원·시군 25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긴급 방제를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피해가 확산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보성군 보성읍에서 농민 윤병구씨가 벼멸구 피해로 쓰러진 벼를 살펴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전남도, 농협 등이 협력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벼멸구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역 주변까지 일제히 방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0년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매입한

것처럼 정부가 벼멸구 피해 벼를 수매해 농가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민들은 “유례없는 폭염에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벼멸구 확산으로 생계마저 위협한 상황에 놓였다.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글·사진 보성=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개시 확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최종 결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아버지 A(74)씨와 딸 B(40)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지목됐

다. 1심에서는 부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법원은 A씨 부녀가 2022년 1월 청구한 재심에서 제기한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주장을 인용해 지난 1월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광주고검이 불복하고 항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식 손실 메우려 관리비 횡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아파트 하자보수 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은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9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통장에 입금된 기금 707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B씨는 A씨의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 A씨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미수금의 반대매매(강제매매)를 막기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급하면 하자보수 통장의 돈을 일단 사용하고 추후 채워 놓는 것이 어떻냐”는 취지로 말을 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없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화제의 판결

농로 제한속도 20km...56.4km 주행은 과실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1심 무죄→2심 유죄

농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께 나주시 한 농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운전자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전조등이 켜진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사고 직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오로지 전조등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현장 농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시속 20km로 설계속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농로는 농기구와 농어민 생산활동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자동차가 농도를 통행할 때 평상시 보다 더욱 속도를 낮춰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고당시 A씨가 고속도로 등을 제외한 1차로 도로의 일반적인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56.4km로 주행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시·전남도지부의 감정결과로 추정된 차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위치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15.66m였고, A씨 주행속도상(56.4km) 정지거리는 31.4m로 측정됐다. 하지만, 시속 35km로 주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15.7m이고, 시속 30km로 주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12.7m이므로, 충분히 감속하고 주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자전거에는 아무런 발광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전 B씨의 발견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광주 국회의원 소환조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A의원을 광주경찰청으로 불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전화방 보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 측에서 흘러나온 수천만원이 지원

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대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이미 구속된 B씨와 A의원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만료되는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